

새 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이 상 은

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 197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1977 :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환경공학 석사
- 1981 :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환경공학 박사
- 1982. 1 ~ 1984. 7 : 미국 Merck Sharp & Dohme Research Lab. Engineering Associate(선임연구원)
- 1984. 8 ~ 1988. 1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환경연구실장)
- 1988. 11 ~ 1991. 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 1991. 7 ~ 1998. 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기술관리센터 소장
- 1998. 9 ~ 2001. 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2001. 3 ~ 현재 : 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 2000 - 현재 대통령자문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1997 - 현재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 위원
- 1997 -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1998 - 200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

서 언

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과 산업화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경제 성장과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자연환경이

희생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였다. 개발과 공급위주의 정책은 고도성장을 이끈 엔진 역할을 하였으나 결국 고 생태비용 저 효율 경제구조에 의한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에 처하게 한 것이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세계 142개국 중 136위로 평가 될 정도의 국가 지속가능성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등을 보면 환경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 새 정부가 갖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 철학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21세기는 환경보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환경역량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환경의 세기'가 되어야 하며 환경 또는 자연자원의 희소성이 삶의 중심적인 동기가 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자연보호를 더 우위에 두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ESSD 이념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도 이제 지난 몇 십년동안 물질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적 육구 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등장한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국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순환시키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해야만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후처리보다는 계획단계에서 환경성이 고려되는 사전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효율성과 형평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의 생활 및 자연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던 지금까지의 환경정책과는 달리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사막화 등 지구환경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시대의 환경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채택한 평가요소들을 보면 좁은 국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도 그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정책들은 성장위주의 정책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되면 이 평가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구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성장은 곧 한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이나 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지수(National Sustainability Index, NSI)를 개발하여 정

부의 각종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운영을 추구하여 경제와 환경을 같이 살리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 시행중인 Eco-2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난 2000년 9월 출범한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총 11건의 정책자문보고서를 채택하고 WSSD 국가준비위원회의 역할 등을 수행해 왔으나 기능이 대통령에 대한 단순 자문에 국한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련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자문 기능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제정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근거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분명히 천명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과 정부, 기업,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리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규제와 단속 위주 그리고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해와 자율적인 환경관리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제 향후의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 관리위주의 환경 정책을 통합 오염 예방 및 관리로 개선

이와 함께 환경관련 정부 조직도 자원관리와 환경관리의 통합, 환경오염의 통합관리라는 차원에서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이지만 건정교 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체제 문제를 비롯하여 지하수 관리 문제, 대기오염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직접 관계가 되는 에너지 정책 문제 재산 가치보다는 보호의 대상인 산림보호 및 관리 문제 등 새 정부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 체계의 확립

환경권의 보장은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우선의 정책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사실 상 자연환경의 훼손은 불가역적인 경우가 많아 우리 후손의 몫까지를 고려하면 그 피해 비용은 막대하여 시후처리에 비해 사전 예방적인 조치는 훨씬 경제적인 환경관리가 된다. 더욱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예방의 원칙은 세대간 형평성을 존중하는 정책이 된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의 생산 및 소비활동, 각종 개발사업과 경제 정책에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 결정 및 예산 운영의 환경성 제고

종래 자유재로 여겨지던 환경자원에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자원의 남용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비용을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비용-저효율 경제로부터 탈피하여 저(환경)비용-고(생산)효율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과도한 물질 재화의 공급에 의존하는 경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 고 생태효율의 순환형 경제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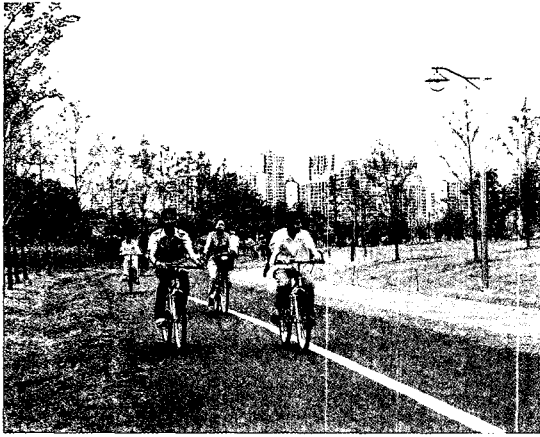
따라서 경제성장, 에너지, 산업, 농업 등 각종 국가 정책의 녹색화에 의해 정책 결정과 예산 운영에서 환경성

을 제고시켜 국토개발, 산업 활동 등 주요 정책의 운용이 지속가능성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환경적인 수용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새만금 사업, 동강댐 건설사업, 경인운하 사업 등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자연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바 있으나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의 판단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사안에 따라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 계획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초래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도입하여 초기 단계인 정책 입안, 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의 강력한 수단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이지만 이는 대부분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에서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행정계획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입안한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전 지속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의 이해 부족과 계획의 완료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시기적인 문제점 등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의 본격 실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70% 이상이 지방의제 21을 채택하였으나 실천력이 부족하여 다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나 주민들은 아직 개발에게 의한 지자체의 발전을 선호하고 있어 환경보전을 주장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인색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환경관리 업무도 상당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개발우선의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2002년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지방에 이양하였으나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관리 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역량 제고의 방안으로는 WSSD에서 적극 권고한 바와 같이 보다 실천적인 '지방행동 21'의 적극적인 추진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행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환경조례 제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예산 및 지출을 일원화시키고 포괄환경보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대상이다. 한편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영역을 유도하고 자율적 환경관리를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화시대를 완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환경관리업무가 적절한 분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자체의 각종 개발관련 예산지원에 환경성과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의 환경관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양여금 중 개발관련 보조금의 배분을 지자체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자연 환경자원을 관리함으로써 개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의 배분기준을 달리 함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국토 이용 및 관리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 3차 국토종합계획 등에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환경성이 강조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대한 원칙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토개발을 주도해 온 개발부처와 환경부 사이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친화성이라는 개념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직은 이들 법률이나 계획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은 선언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성장과 개발우선의 정책으로 국토개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어서 좁은 국토에 대한 높은 개발 압력에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가 환경친화적인국토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과 국토 이용을 대등하게 고려하는 '국토환경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의 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개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기존 토지를 적극 재활용하는 종합적인 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토지절약형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이용은 철저한 선 계획,

평가 후 개발이 지켜져야만 가능하게 된다. 각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고려하여 국토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국립공원등 공원의 관리도 거점 도시에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서 공원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공원 관리 및 개발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신 행정수도의 건설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건설될 신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하며 공급위주의 도시 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과밀에 시달리는 도시의 모습에서 벗어난 생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자연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만의 공간'인 기존 도시가 아닌 '자연과 공생하는 인공 공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신 행정 수도가 서울과 같은 문제점투성이의 대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며 여기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개념이 중요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또한 물 순환, 에너지 순환 등 자연과 자연자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순환형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같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입지 선정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이 철저히 고려될 때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친화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생태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이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조세체제를 개편하여 노동가격을 낮추고 환경과 자원의 가격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노동가격에 반영되는 소득세 세율을 낮추고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소나 제품에 대해 환경세(에너지세, 탄소세 등)를 부과하고 자원이용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은 기술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의 수요는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청정생산기술과 환경기술 그리고 환경친화제품 설계 및 생산 기술의 확보는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느새 '소비문화'에 젖으면서 알게 모르게 환경에 큰 부담을 주어 왔던 소비자들도 소비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친화제품 유통의 활성화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하여 이 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녹새구매법'의 제정을 서두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사회구조도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하게 자원순환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정생산체제를 갖추고 자원을 절반 사용하면서 생산성



을 2배로 높은 자원절약형 산업사회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또한 소비 동기를 유발하는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소비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모든 자원을 재사용 하는 '순환형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새롭고 보다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왔으며 수요가 있는 곳에 물이든 에너지든 필요한 것을 새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사용한 후 버리는 Throwaway Society에 젖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나 물 그리고 모든 자원에 대해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증가해 가기만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적절한 수요관리에 의해 수요를 줄이고 공급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최소한 이

비중을 10% 이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에서의 폐기물 정책은 3R(Reduce, Recycle, Reuse)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되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시설의 확충과 재활용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재활용품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재생된 제품은 다시 쓰레기로 변화될 뿐이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적인 발전

앞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이 새로운 기술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할 때 환경기술의 발전은 환경시장에서만 아니라 국제시장 전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기술의 선진화와 청정기술 및 환경복원 기술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의 실시와 환경산업의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20세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충족시켜왔던 것도 사실이며 환경문제의 해결과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도 기술로서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물질 지상적인 가치관과 맞물리게 되면 인간성 상실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기술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나 GMOs 등의 문제는 비환경적이고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필요가 발생할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기에 앞서 그 제품들이 환경에 돌이킬 수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의 환경성이 강조되는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고 오늘날의 환경위기가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그 근본 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하겠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되며 범 지구적인 문제인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현재 200개에 가까운 환경관련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있는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약의 채택 외에도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구조의 정착, 효율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구축 등과 같은 국내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협약들은 많은 경우 무역규제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이 앞서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 온 선진국들은 환경을 내세워 세계질서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범 지구적인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각종 국제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는 보다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외교가 중요하게 된다. 즉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한다는 자세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고 관, 산, 학,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partnership을 바탕으로 하는 범 국가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지역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가와의 환경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민간 및 정부차원의 남북환경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 이후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감은 있지만 개발제한 구역해제 등과 같은 비 환경친화적인 정책 또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환경의 세기' 인 21세기에 환경문제가 다른 분야와 우선순위를 경쟁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도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다른 분야에 앞서 환경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지도 이제 20년을 지났으나 짧은 기간에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 지수(ESI)는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 해 온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나타낸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미흡했던 사항들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발전 정책은 새 정부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느 한 sector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자율적인 협력체제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성숙된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개선 정책이 구현될 것을 기대한다.